

ESI社, XSiL社의 반도체 웨이퍼 관련 지식재산권 매입

세 계적인 포토닉스, 레이저 시스템 전문업체인 Electro Scientific Industries社(ESI)는 아일랜드 XSiL사로부터 모든 지식재산권과 일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매입하였다고 발표했다. XSiL사는 강한 기술력과 견실한 특허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반도체 웨이퍼 싱글레이션(wafer singulation) 어플리케이션의 파단강도 및 원료 처리량을 개선한 고수익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XSiL사의 주요 지식재산권을 Cignis 반도체 프로세싱 플랫폼에 적용하여 박막 웨이퍼 다이싱 장비를 개선하면서 ESI사의 2009년 4사분기 회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ESI사 대표이사인 Nick Konidaris는 “7년여 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웨이퍼 레이저 다이싱 장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XSiL사로 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은 ESI사에게 가치 있는 프로세스 개발과 첨단 기술력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며, “최근 모바일 장치에 적합한 더 많은 기능과 메모리공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얇은 형태의 실리콘 웨이퍼를 개별화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의 공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Cignis 플랫폼 기술과 XSiL사의 기술을 접목시켜 신(新) 웨이퍼 레이저 다이싱 장비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드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지식재산권 매입은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앞선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한 예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www.esi-group.com

홋카이도 대학 TLO 부서, 타 대학의 민간 기술이전 지원으로 업무 확장

호 카이도 대학은 지난 5월 11일, 대학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한 기술이전기구(TLO)로서 문부과학성 장관과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 홋카이도 대학 산학협력본부 내에 마련한 「TLO 부서」는 홋카이도 대학 이외에도 타 대학 등의 특허 출원이나 민간 기술이전 업무를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의 학내 조직이 타 대학의 TLO 업무를 실시하는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TLO 부서는 지난 3월에 해산된 민간 기술이전기구인 홋카이도 TLO의 기능을 승계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현재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나 사무직원 등 14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3명은 홋카이도 TLO에서 승계된 인력이다. 향후 코디네이터 2명의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TLO 부서에서는 홋카이도 소재 대학의 연구 성과를 특허로 출원하거나 특허 실시권을 민간 기업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학에서 발생된 벤처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도(都) 내외 대학의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광역 협력실」을 설치하고, 현재 3개 대학과 기술이전 업무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같은 지역 내의 민간 기업 등으로 구성된 무료 회원 조직에 특허 정보를 일부 공개하기도 하였다. 홋카이도 대학은 바이오나노텍, 정보기술(IT) 계열에서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의 유상 제공 등을 통해 연간 2천만 엔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TLO 부서장인 아라이소 쓰네히사(荒磯恒久)는 「도내 대학의 지식재산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역 산학협력 활동을 확고히 하고, 연구 성과나 축적된 과학기술을 홋카이도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www.hokkaido-np.co.jp

일본 IPB, Patent Result에 「페이턴트 스코어」 등의 사업 양도

특허 분석 툴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Patent Result와 민사재생절차를 밟고 있는 IPB는 Patent Result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에 합의하고, 지난 5월 11일자로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근거하여 Patent Result는 IPB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의 질적 평가 지표 「페이턴트 스코어」와 관련된 서비스, 특허의 평가 툴인 「페이턴트 아틀라스」, 「페이턴트 아틀라스 for professionals」, 특허력 등급 평가 서비스 「페이턴트 익스프레스」 등의 제품과 서비스, 고객,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받아 특허 분석 업무를 효율화하는 다양한 분석 툴을 개발·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www.ipb.co.jp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새로운 공동 특허시스템 구축 착수

유럽연합 회원국은 개인과 기업이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된 단일 특허를 얻을 수 있는 「Community Patent」라는 EU 특허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특허는 이노베이션과 창조성을 자극하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멘틱 웹(semantic web) 기술을 사용하여 유럽연합 연구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250만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PatExpert」(앞선 특허 문서 처리 기술) 프로젝트는 기능 서비스의 개발과 특허 절차의 최근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한다.

「PatExpert」는 특허정보의 검색, 분류 및 다국어 제작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발명가와 특허 심사관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허 문건을 평가하고 시각화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Leo Wanner 교수는 ICT 결과 보고에서 “PatExpert의 가장 큰 성공은 문자에서 의미론적으로, 현재의 특허 절차 서비스가 따르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였다”고 했다. “특허 분야에서 의미론적 기술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PatExpert에서 사용된 의미론적 기술은 특허 문서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며, 검색, 분석 및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스페인 Pompeu Fabra 대학의 한 연구자는 덧붙였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그룹에서 이미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Wanner 교수에 의하면 “몇몇 기술에 대하여 외부에서 의뢰한 일반 성능 연구를 수행 중이며, 프로젝트 파트너인 Brüggmann Software사도 그들의 주력 특허 관리 제품인 「PatOrg」에 대한 일부 PatExpert 기술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언급했다.

Wanner 교수의 말에 의하면 “PatExpert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제공하므로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모든 개별 기술들이 독립하여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다른 특허 처리 서비스와도 조합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이 PatExpert의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허 절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업무량이다. 출원 절차는 “기술 명세서”(예컨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함), “특허 출원”(예컨대 특허청과 출원간의 상호 작용) 및 발명이 승인을 기다리는 “특허 계속” 중인 상태를 포함한다. 특허출원이 특허청의 법률을 충족하고, 벌써 특허를 받지 않았을 때 부여된다.

EPO(유럽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함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문건을 목록화한 선행 기술 보고서를 준비해 놓고 있다. EPO 수장인 Alison Brimelow는 “업무 적체는 특허 시스템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특허 시스템을 정립한 자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호성을 만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ec.europa.eu

장쑤성 상무위원회, 자주적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경제 분야 중점 사안으로 결정

최 근 장쑤성 상무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부의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자체 브랜드 육성을 당면한 경제 연구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경제 불황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내수성장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쑤성은 일사분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4월분 경제도 상승적인 추세로 나타나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대외 수출입의 하락이 여전하고, 기업 효율성이 하강하는 등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불명확한 요인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시기에 경제 향상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 www.sipo.gov.cn

일본 농림수산성, 농수산물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국조직 설립

일 본 농림수산성은 6월에 해외에서 국산 농수산물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했다.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일본 지명을 마음대로 상표로 등록하거나 현지 농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으로 위장 표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지 당국에 개선 요청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전국조직은 「농림 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농업단체, 기업 등의 참가를 상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차 농산품의 수출을 다루는 농업단체나 기업 중 8%가 상표 등록이나 산지 위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농수산물의 산지로 지명도가 높은 홋카이도도 많은 피해를 당해, 대만에서의 현지조사에서는 대만산 우유 라벨에 「홋카이도」라고 크게 표시하거나 산지 불명의 가리비에 「오호츠크해산」이라고 적는 등의 예가 있었다.

이를 방지한다면 일본 농산품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일본 지명이 현지에서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경우 향후 진짜 수출품의 산지 표시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수출 그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이에 전국조직은 전문 업자에게 위탁하여 중국과 대만에서의 상표 등록 출원 상황을 조사하고, 희망하는 단체에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현지 소매점에서의 산지 위장 현황을 무료로 조사했다.

산지 위장 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피해 단체, 기업 등이 현지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고발 등의 절차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농산품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도 이 조직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www.hokkaido-np.co.jp

국무원, 중국의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사업발전을 독려

국무원은 얼마 전 「국무원 중국의약사업발전 지지와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의약법제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중서(中西)의학 모두 중요하지만 중국의약의 영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에서는 중국 의약사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의약법제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의약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법률과 법규를 완성해야 한다. 중국의약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여 중국의약의 특허심사 표준과 중국 의약품 품종보호제도를 보완했다. 중국의약품 보호 리스트를 제정하며 중국 의약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중국 의약품의 전통약재 원산지 보호업무를 강화하고, 전통약재의 우수함을 지식재산권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의견」에서는 중국의약의 산업발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대 중국의약의 공업과 상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이테크 산업화의 항목으로 조직하여 지지도를 확대했다. 중국 의약업의 유명 상표 및 저명 상표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강화했다. 중국 의약품의 수출체계를 최적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중국 의약품 관련 기업이 국제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약 사업발전 지원 및 촉진의 중요성과 시급성 인식
- 중국의약 사업의 사상과 기본원칙 발전
- 중국의학과 예방보건 서비스의 발전
- 중국의약의 계승과 창조 추진
- 중국의약 관련 인재풀 강화
- 중국의약 산업발전 수준 제고
- 민족 의약발전 가속화
- 중국의약문화의 번영과 발전
- 국제적인 중국의약 사업발전 보장 대책

출처 : www.sipo.gov.cn

영국 지식재산국, 녹색 기술을 위한 특허 출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실시

지난 5월 11일에 개최된 중국-영국 경제·재정 회담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기업이나 사업체들은 특허 출원 “Fast track”의 일종인 환경 지향적 이노베이션 「green channel」을 통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영국 지식재산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의 특허사무관 Sean Dennehey는 이번 제도가 녹색 기술(Green technologies)의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9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특허 등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중요 기술의 신속한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녹색 기술의 특허 출원은 5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UKIPO는 주당 23,500여 건의 특허 출원 신청을 받고 있고, 그 중 150~200여 건이 녹색 기술과 관련된 특허이다. UKIPO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www.ipo.gov.uk

영국 미디어업계, 영국 의회에 인터넷 상의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영국의 거물 미디어 그룹인 「The Copyright Squad」는 그동안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관하여 할리우드(Hollywood)의 미디어 기업들과 간담을 가져왔고,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하여 영국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미디어 파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ISP측의 경고 조치와 그 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부터의 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협회(UK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UKISPA)는 자신들도 온라인 불법 침해의 감시와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번에 영국의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The Green Paper”가 지난 2월 The Times of London지에 사전 유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The Times지는 최근 보도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된다면 “Three Strikes” 제도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ISP도 그리 안전한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개인 온라인 이용자와 ISP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BBC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스웨덴에서 새로운 저작권침해금지법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IPRED)」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33%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으며, 스웨덴과 유럽연합이 IPRED 제정 등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2009년 4월 세계 최대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스웨덴의 파이어트 베이(Pirate Bay)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식재산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웹 서버들은 처벌받지 않아 왔다. 한편, 미국에서도 2008년 10월 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법(Intellectual Property anti-piracy law)을 제정하였고, 이에 뒤이어 Obama 미 대통령 정부도 미 무역대표부의 Ron Kirk를 캐나다에 파견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제정과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유럽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각국 미디어 협회들은 합동으로 「EU Green Paper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A Call to Action」을 발표하여 추진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간 불법 침해로 인해 손실되는 액수가 연간 45억 유로에 달한다고 전했다.

출처 : www.wrx.zen.co.uk

일본, 중국의 「원시 코드 강제 공개」로 자국의 IT산업에 대한 우려감 표시

중국 정부가 IT보안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 시행을 공표한 것에 대해, 일본 IT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IT 보안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라는 것은 중국이 WTO에 가맹했을 때 제정한 CCC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의 일환이라고 한다. CCC 인증은 전기제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공업 규격으로,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대책 소프트웨어 등 IT보안 제품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강제로 원시 코드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 가전도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었고, 원시 코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일본·미국·유럽 정부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여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였다.

결국, 중국은 2010년 5월로 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그 대상을 정부 조달품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의 염려는 당연하지만 일방적으로 내몰린 중국에도 할 말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이 제도는 그 진위보다 1980년대 일본의 IBM 산업스파이 사건이나 TRON 프로젝트의 좌절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은 지금 중국과 같은 입장으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제당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일본의 IT산업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로, 미국에 있어서는 일본의 IT산업이 큰 위협이었다.

중국은 지금 경제대국, 소비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IT산업에 있어서도 머지않아 1980년대의 일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도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 공개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고, 싫으면 거래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중국의 시장과 강력한 라이벌 기업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비난당하는 쪽에서 비난하는 쪽이 된 일본이지만, 과연 이번 강제 인증제도로 일본 IT산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IT산업에는 미국 제품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제품,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일본의 IT산업은 이번 강제 인증제도에 대해 이렇게 과민반응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며, 사실 중국의 제도 정책보다는 일본 IT산업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 itpro.nikkeibp.co.jp

국가관권국, 전국 통일된 저작권 등록기구 설립

국가관권국의 관리 감독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 등록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는 저작권 등록방법의 수정 과정 중에 확정된 안건으로, 순조로운 저작권 등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가관권국에 의하여 선택된 기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 등록 기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 등록기구가 사용하는 통일된 명칭이 전국 등록 업무에 사용된다고 한다.

통일된 등록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통일된 규범으로 등록하기 편하고, 등록절차, 심사표준, 등기증서, 등기정보를 모아 공지하고 문의하는 것을 단일화시켜 실행함
- 등록업무의 중복에 따른 혼란의 발생을 피하는데 용이하고, 관리 감독이 편리함
- 등록정보화시스템 개발이 편리하고, 정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재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
- 각 지역 저작권 등록발전의 불균형 사태를 해결하고, 등록 비용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등록기구 통일 과정 중에 반드시 주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저작권자가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분산된 저작권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등록기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전달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적당한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각지에 기구의 지사를 설립했다. 각 지사의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재정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였다.

현재 많은 지역이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발전을 위하여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지사 설립 시, 반드시 각 지역이 저작권 행정관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관권국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건을 갖춘 사업기구, 사회단체 혹은 기타 기구를 추천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각 지역의 지사는 현존하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추진한다.

지사가 합리적으로 설립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구 지사의 설립과 관리를 국가관권국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신빙성을 높이고, 미래에 설립될 지사의 다른 직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구와 유사한 「국가 저작권 등록센터」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 www.sipo.gov.cn

파나소닉 등, 신규 지상파 디지털방송 녹화기기에 저작권료 추가 거부

지난 4월 8일, 파나소닉이 새로 발매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녹화기기에 「저작권료」는 추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저작권 관리 단체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시바 역시 저작권 관리 단체에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제조업체의 협력 의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시오타니(塩谷) 문부과학성 장관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이다.

저작권료란 DVD 레코더 등 디지털 녹화기기에 부과되고 있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제조회사측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녹화는 「더빙 10」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복제가 제어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보상금 대상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녹화를 제외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업체에 보상금 징수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 규정에 반대하여 제조업체가 협력을 거부하는 방침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부과학성 장관의 답변 역시 국가 기관으로서의 처음으로 제조업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었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서 제품가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여, 보상금관리협회 등을 통해서 배우 등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DVD 레코더의 경우에는 1대 당 수백 엔 정도이다. 파나소닉은 4월 8일자 문서에서 새로 발매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용 기종에 대해 「보상금 징수에 협력할 수 없음을 통지해드립니다」라고 협회에 알렸다. 파나소닉 홍보 그룹은 「이번 기기는 지불 대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제조업체만의 판단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에는 협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출처 : www.asahi.com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

